

아시아태평양 핵군축의 재고

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모든 정책 그리고 활동을 옹호해오고 있다.

- 반면 중국과 한국은 일본에게 단순히 '정직하고 깊은 반성' '올바른 역사 지식'을 통해 '역사 개념을 바르게 인식'하라고 요구한다.
- 일본은 이러한 훈계들이 그저 말뿐임을 잘 학습해오고 있으며, 자국의 역사 이야기를 색다른 프로그램과 전략으로 공고히 구성해 국내외로 퍼뜨리고 있다. 아베 정부는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한 시험(문제)에서부터 일본 외교관이 유엔 관료들에게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까지, 역사 문제를 주도해나가고 있다.
- 다른 이들이 소극적인 데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또 다른 이들이 진실을 추구하고자 할 때는 논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만주와 조선을 침략해야 한다고 주장한 요시다 쇼인이 운영했던 학교 쇼카손주쿠 근처에 있는 탄광과 제철소를 일본의 근대화 산업시설로 최근 유네스코에 등재시킨 것이 좋은 예이다. 유네스코가 역사를 세계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일본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박진오

- 워싱턴 현지에서 아베 정부가 역사 문제에 대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정리해주어 감사하다. (동)아시아에도 유럽과 같은 미래 평화 구축을 지향하는 유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글로벌화와 지도자의 역사인식

이종국

- 글로벌 역사관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지도자의 역사인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글로벌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역사 문제가 이슈화됐다. 냉전기에는 미국의 리더십이 그런대로 효과적으로 기능했으나, 1989년 냉전 종식 후 동아시아에서는 한중일 역

사 문제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는데, 이는 중국 부상과 지역 정치지도자의 지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강화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원우

- 글로벌 시대에 지역 정치지도자들의 한계를 노정시키는 현상과 비례해 동아시아의 국가 간 역사 문제는 참여하게 대립되게 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그 입구에서 좌절하고 있다. 따라서 자국사를 중심에 두는 공동체 형성에 주력하기보다는 동아시아사 자체를 공동의 역사로 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교과서 내용 개선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교육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미담'을 총정리해 책자나 영상 등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양국 시민과 학생 간의 상호 방문 여행이나 방문 수업 등을 통해 서로의 역사를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역사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행태에 비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컨대 일본이 워싱턴에서 전개하고 있는 과거 침략주의에 대한 정당화와 미화를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일국사 내지 민족사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역사를 볼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체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을 각국의 지도자들이 깨닫고 실천해야 함.

동아시아재단

사회	라메시 타쿠르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 공동의장/ 전 유엔 사무총장보
발제	이홍구 전 대한민국 국무총리 카를로스 소레타 주러시아 필리핀 대사 존 킬만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 연구부장
정리	김가원 동아시아재단 펠로

라메시 타쿠르

- 우리는 제1핵단계에서 제2핵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냉전기 제1단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극 체제에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대결이 벌어졌다. 이때는 전략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제가 존재했다. 현재의 제2단계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핵무기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핵보유 국가가 다수로 늘어난 데다 억지 관계가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예컨대 인도와 파키스탄은 개념적, 정치적, 전략적으로 중국과 얽혀 있다. 핵전쟁은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의 경계도 점점 흐려지고 있다.
- 아시아에는 세 가지 범주의 핵보유국이 있다. 첫째, 핵 비확산조약(NPT)이 공인하는 핵보유국, 즉 중국이다. 중국은 핵 비확산조약 6조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비확화와 핵군축의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둘째, 비NPT 국가인 인도와 파키스탄이다. 셋째, 전 NPT 회원국이자, 현재는 탈

퇴한 북한이다.

이홍구

- 최대 관심사는 양대 초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의 관계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항상 스스로를 대서양 세력이라고 간주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미국은 경제, 정치적으로 동해안에서 서해안으로 중심이동을 했다. 하와이와 알래스카가 주로 인정받아 미국 영토로 공식 편입된 이후 미국은 지리구조적으로도 태평양 쪽에 더 가깝게 되었다. 하와이 출생인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여겨왔고, 재임 기간 중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발표했다.
- 냉전 기간 중 미국과 소련은 각기 상이한 경제체제를 갖고 있었고 서로 고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시장에 편입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은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유일한 방도이기도 했다. 이것은 냉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다. 합리적 시장경제가



라메시 타쿠르



이홍구



카를로스 소레타



존 틸만



미중 간 공존·공영하는 상호 관계를 조성하기에 충분한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 모두 상업 문화가 대국 굴기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 한중일은 상호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들 3국의 미래 운명을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들 간의 친선 우호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존재 때문에 일관된 외교정책을 견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아시아는 지역적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대륙 전체가 핵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바로 이웃한 북한 문제에 몰두한 나머지, 거시적 관점을 갖기가 어렵다. 이제까지 북한이 조성해온 핵위기는 북한식 예외주의와 세계·지역질서에 반발하는 성향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은 두 개의 세력 관계 서클에서 중심점에 자리 잡고 있다. 하나는 미국-중국 서클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중국-일본 서클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는 불참하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에는 참여하고, 베이징 천안문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식에 동석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공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두 개 서클을 한데 아울러서 관련 당사국 모두와 대화를 통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 호주를 포함한 동아시아만 놓고 본다면 제1핵단계와 제2핵단계의 차이를 크게 실감할 수 없다. 북한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이 역내 유일한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과거 유럽 국가들이 소련을 바라봤던 시선과 다르지 않다.

-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급부상은 예상 밖의 일이라 한국이 핵무장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내놓기는 힘들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핵무장을 원하지 않고, 일본에서의 한국인 피폭자가 많았던 경험에서라도 핵무장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카를로스 소레타

- 대서양과 중동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태평양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가장 적은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곧 비핵화 전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핵무기 감축을 위해서는 더 많은 신뢰 구축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러시아는 중국과 일부 아세안 국가들과 해군 연합훈련을 해왔다. 동시에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꺼려왔다. 이런 태도는 푸틴이 확실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 제2핵단계는 1단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권역에서 지역마다 다른 관계를 맺어왔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협력, 동남아에서는 경쟁, 남중국해에서는 대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존 틸만

- 핵우산은 핵 안보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다. 국가들은 핵우산에 의한 확고한 보장 아래 다자간, 양자 간의 상호 신뢰 구축 조치에 참여하는 데 동의해 왔다. 예를 들어 호주는 비확산조약의 지원을 전제로 핵 능력을 포기했다. 여기에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역내의 핵보유국 숫자를 줄이는 것이 자국 안보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했다.

- 핵우산은 대한민국과 나토 국가들의 경우처럼 공식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호주와 일본의 경우 핵우산은 비공식적 형태인데, 핵우산의 존재는 관련 정부 간 성명으로 발표된다.
- 아시아·태평양의 핵무기 감축을 위해 새로운 사고가 긴요한 시점이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하고 있는 비핵 국가들도 핵군축 노력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자국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고 있고,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호주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선두에 섰고 국제핵비확산및군축위원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았다. 냉전시대 나토와는 달리 아시아에는 현재 상호 신뢰 구축의 기반이 없는 상태다.

■ ■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핵군축을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사고가 아시아 지역에서도 필요하다.
- 제2핵단계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핵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아직 부족함. 대서양에서의 핵 안보 구조와는 다른 구상이 등장해야 함. 아울러 기존 군축안에서 반보 또는 일보 더 나아가 트랙1.5, 또는 트랙2.0을 만들어내려는 지적 노력이 절실함.
- 아세안지역포럼(ARF)은 애초 핵문제를 다루도록 짜여져 있지 않았고 이 문제를 다룰 기구가 없음. 동시에 동남아비핵무기지역구상은 진전이 없는 상태임. 대서양에서와 같이 책임성을 띤 신뢰 구축 조치 도입이 시급함.
-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아시아 각국 지도자들이 미래의 위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필요 있음.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요구가 엄존함.